

#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의제 논의... 영수회담, 다음주 유력

### 대통령실-민주, 오늘 2차 실무 회동...지원금 부정적 견해서 선회 사회적 취약 계층 한정·금액 조정 가능성...민주 “규모 협의 가능”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 ‘선별적 제한’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에도 가능성을 열고 실무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회동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부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전준호 대표비서관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첫 회동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별 지원’ 논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논의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방침을 유지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16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

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아당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담 성사를 위해 양측이 조율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최대한 접점을 찾고 성의를 보이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재정 건전화와 추구하고자 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해온 만큼,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금액 등을 조정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즉답하기보다는, 일단 경청한 뒤 대통령실 및 정부 검토를 거쳐 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실무 협의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시행령 통치에 대한 사과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참모진과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회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요구 조건에 따른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의 합의 불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홍익표 “국힘, 총선 민의 따라 국회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국회의원 3년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며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 안건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 장병의 사

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피해자 중에 70%에 달하는 20-30 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고 해야 한다. 재정 운영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지방정가 라운지

## 박수기 광주시의원, 지방의원 최우수상

###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박수기 광주시의원(민주·광산구5)이 거버넌스센터 주관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는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전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하기 위한 정치 부문 공모대회다.

박수기 의원은 ‘모두를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공모 주제를 제출해 관계기관, 시민사회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는 회의

공개 원칙을 넣었다. 또 위원 구성 과정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항,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국 최초 모범사례”라며 “의원 대상 공모로 대표로 받는 것일 뿐이다. 상을 도시계획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광주 시민사회를 비롯해 협력한 전문가들, 시의회와 관계기관의 헌신적인 속의 과정에 바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 이재명 “與 ‘채상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르길”

### 민주당 최고위...“더내고 더받는 연금안, 의미 매우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감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호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만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 위성정당 서미화·김윤 합류...민주당 171석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김 당선인과 시민사회 측은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두 당선인이 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에 반

대하지 않고 당에 남아 최종적으로 민주당 소속이 되도록 결정했다고 민주당 관계자 등이 전했다.

서·김 당선인과 시민사회 측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합류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까지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서·김 당선인이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신생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려워졌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당선인 총 6명은 물론 서·김 당선인과도 손잡아 야당장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